

호우 피해 신속 복구를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 개최

-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호우 피해 지원 및 복구대책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7일(목)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지방정부(경남, 통영, 거제), 공공(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전통시장 등이 침수되고, 도로·하천·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많은 주민이 일시 대피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대피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체계에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복구상황 및 지원대책 ▲지방정부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공공·사유 피해시설 3,575건 중 85.2%(3,045건*, 8.27.기준)가 완료되었으나, 미완료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 응급복구대상 : 공공시설 836건 중 612건 완료, 사유시설 2,739건 중 2,433건 완료
거제시 공동주택 단전·단수에 따른 일시대피자 불편해소를 위한 지원대책, 전통시장·상점가 소상공인 용자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발생 초기 지원된 3천만 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전기설비의 복구가 지연되고 연일 폭염까지 겹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던 주민의 생활 불편이 커지고 일시대피자가 늘어난 현장 상황을 적극 고려한 것이다.

※ ('26.8.19.) 호우 피해 지역 재난구호지원사업비 거제 3천만원, 통영 1천만원 기 지원
교부된 재난구호사업비는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 제공을 비롯해 생수 등 필수 구호물품 지원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부터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앙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피해확정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피해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담당자	사무관	신명수 (044-205-5321)

